



의안번호	제 2009 - 24 호
의 결 연 월 일	2009. 12. 21. (제22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1팀 제26차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1
나. 기타 사항	3
II. 2팀 제18차 회의	3
1. 일시 · 장소	3
2. 참석자	3
3. 주요 안건	3
4. 회의 요지	3
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4
나. 기타 사항	8
III. 제21차 전체 회의	9
1. 일시 · 장소	9
2. 참석자	9
3. 주요 안건	9
4. 회의 요지	9
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9
나. 기타 사항	23

IV. 향후 일정 25

별첨 성범죄 양형기준(참고자료)

김현석,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 보고(요약)”

김현석,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 보고”

이주형, “아동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이주형,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 양형기준에 대한 입법례(참고자료)”

정동민, “성범죄 양형기준 일부개정안”

이연주,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개정 제안서”



I. 1팀 제26차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2. 3.(목) 19:45 ~ 21:45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2. 참석자(4명)

- 김현석, 서봉규, 이상원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4. 회의 요지

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김현석 전문위원이, 배포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에 따라 발표

(1) 주취 감경의 제한

- 법관이 심신미약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양형기준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형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양형기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절차나 입증수단 등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양형기준이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김현석, 이상원)과, 심신미약 해당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에 포함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봉규)이 제시됨

- 주취감경의 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저질러진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양형기준에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오히려 가중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상원)이 제시됨

(2) 특별양형인자의 조정

- ‘약취·유인·감금이 수반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이를 경합범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상원)과, 성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경합범에 한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 처리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김현석)이 제시됨

(3) 형량 상향조정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종전 양형실무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야기된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형량 상향이나 기본틀 변경 등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을 조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봉규)이 제시됨
- 조두순 사건 이후 형성된 여론을 기초로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만을 성급히 수정하기보다는 우선 2기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한 이후에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충분한 시행경과를 분석

한 다음 1기 양형기준 전반에 대한 수정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상원)이 제시됨

- 현재로선 양형인자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절히 보완하고, 양형기준의 기본틀에 대한 수정은 유기형 상한 폐지 등의 입법 경과 등을 지켜본 후에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김현석)이 제시됨

나. 기타 사항

- 2기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양형자료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II. 2팀 제18차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2. 4.(금) 16:30 ~ 18:2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2. 참석자(3명)

- 윤정근, 이주형, 최석윤 전문위원

3. 주요 안건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4. 회의 요지

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이주형 전문위원이, 배포된 「아동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따라 발표

(1) 권고형량범위의 상향 문제

- 권고형량범위 상향에 찬성하는 의견(이주형)
 - 이번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현재 양형기준은 기본형량범위가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고,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 등의 경우에는 그 권고형량(1년6월~3년)이 그 법정형의 하한(5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 이번 조두순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치 전혀 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법관은 작량감경되어 법정형보다 하한에 있는 권고형량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형법에 위배되는 문제 야기
 - 따라서 기본형량을 법정형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양형기준 형량범위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
 - 시행경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자는 의견(윤정근)
 - 조두순 사건의 경우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니고, 특수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여 형량을 바로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조금 더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그 시행결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나서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중형주의를 채택하는 것에 반대(최석윤)
 - 형사정책은 중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님
 - 선진국이 되어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자율주체성, 형벌감수성이 민감해져서 가벼운 형벌로도 실효성을 확보하게 됨

- 양형이 단기적으로는 너무 가볍게 선고된다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사회가 발전할수록 합리적으로 완화되는 현상 발생
-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형량을 높이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태를 소위 ‘상징형법’ 이라고 함
- 또한 조두순 사건은 매우 특수한 사례로서 양형기준이 예상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

(2) 형량범위 하한 가중의 문제

○ 형량범위 하한 가중에 찬성하는 의견(이주형)

- 현재는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해도 권고형량범위가 상당히 중첩되고 특별(가중)양형인자가 두 개 이상 존재하여 가중영역 상한의 2분의1까지 가중되더라도 하한은 역시 7년에 머무르게 됨
- 또한 특별가중을 하는 경우에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여전히 법정하한인 징역 7년으로 범죄의 악성이 가중됨에도 하한은 여전히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음
- 예컨대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징역 7년이 선고되어도 양형기준 범위 내에 해당하게 되고, 법관이 징역 7년을 선고하여도 양형기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음
- 특히 강도강간의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많아져서 특별조정을 하면 권고형량범위가 ‘9년~15년, 무기’로서 피고인의 악성이 강해질수록 권고형량 범위가 법정형(10년~15년, 무기)보다 더 넓어져 법관의 양형재량이 더욱 확대되어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양형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
- 따라서 적절히 양형기준의 하한을 가중하고, 형량범위 구간의 중첩을 최소화하여 기본과 가중, 기본과 감경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함

○ 형량범위 하한가중에 반대하는 의견(윤정근, 최석윤)

-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채택한 양형기준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가중/기본/감경’ 영역을 제시하는 것이고, 특별가중, 감경영역을 둔 것은 이례적으로 중하거나 가벼운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 놓은 것이고,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에는 극히 중한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것임
- 그리고 양형기준제 방식과 중첩 문제 등은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양형기준 시행경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현 시점에서 다시 수정여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행경과를 조금 더 지켜본 후 충분한 검토·분석을 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
- 또한 형량범위 하한을 가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제 방식 결정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형량범위 하한 가중 역시 권고형량 상향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시행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다음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어느 정도 문제점을 지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건 수와 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해 본 다음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

(3) 중한 상해의 세분화

- 중한 상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주형)
 - 미국 연방이나 주의 경우에도 ‘중한 상해’와 ‘영구 장애 및 생명에 위협을 야기하는 상해’에 관해서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별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특별양형인자의 조정은 검토되어야 할 사안 내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에 해당(윤정근, 최석윤)
 - 특별양형인자의 조정은 제1기 양형기준 정립 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수 있음

(4) 주취감경의 문제

- 주취감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주형)

- 현재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을 일반감경사유로 채택하고 있으나,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 감경사유로서 작용하게 되어 처단형의 범위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어 형법규정에 배치되고 처단형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임
- 현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은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법관이 결정하고,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
- 현재 외국 입법례에 의하면 음주상태의 범행을 가중사유로 정하거나(영국) 자발적 음주인 경우에는 감경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뉴질랜드)가 있음
- 따라서 현재 형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심신미약의 인정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윤정근, 최석윤)

-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5)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감경인자로 볼 것인가

-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주형)

- 13세 미만에 대한 위계 위력은 13세 미만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인의 경우 반항할 수 없는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함

-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양형기준 시행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윤정근)

○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최석윤)

- 고의, 과실의 차이 및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에 차이를 두고 있듯이 폭행, 협박과 위계, 위력에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으나,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지적 능력이나 의사능력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불법에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였음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 및 논의가 필요

나. 기타 사항

(1) 양형자료 분석방안

○ 확정사건 기록을 보고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4만3,000건에 대한 확정사건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 4만3,000건에 대한 상세 양형조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게 됨
- 새로 정립할 8개 범죄에 대해 이미 조사된 건수는 4,479여건에 불과하고 추가로 조사할 건수도 현재 3,854여건에 불과하여 업무부담이 크지 않음(이주형)
- 최초 양형조사 방식 결정시 결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최석윤)

○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윤정근)

-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 필요

○ 그밖에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전문위원 연간 계획(1년 및 2년 단위, 연간 4개 범죄씩 나누어서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및 위원회의 의

결을 받는 것이 필요

- 최초 기준 분석 및 수정, 보완 기준 마련과 관련한 일정 작성 필요
- 현재 전문위원단의 업무 가중정도를 고려하여 결원중인 전문위원 4명에 대한 총원 여부 논의 필요
- 양형위원이 회의 시 제출한 자료의 보존 방법 논의 필요
- 양형위원회 국회 보고 방안 등 일정 마련 필요

Ⅲ. 제21차 전체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2. 7.(월) 15:30 ~ 20:1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9명)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현석, 서봉규, 윤정근, 이상원, 이주형, 최석운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4. 회의 요지

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1) 주취감경 및 심신미약 감경

(가) 정동민 위원 개선 의견 검토

- 의견 요지

음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가의 감정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경의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찬성 ◆

● 위 개선 의견에 찬성(서봉규, 이주형)

-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여 주취감경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현행 실무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
- 영국이나 미국 등의 양형기준에서도 주취상태의 취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뿐만 아니라, 양형정책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반대 ◆

● 위 개선 의견에 반대(강영수, 김용철, 김현석, 윤정근, 이상원, 최석윤)

- 양형기준은 사실인정을 통해 확정된 양형인자를 양형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양형인자의 심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내용으로 삼기에 부적합
- 양형위원회의 업무인 양형기준 설정과 양형정책에 관한 연구·심의가 구분되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은 양형기준에 포함할 사항은 아님
- 음주를 원칙적으로 감경에서 제외할 경우 헌법상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공방을 거쳐 입증되어야 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특정 증거방법에 의해서만 증명하도록 할 경우 자유심증주의나 입증책임 원칙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주관적 진술을 증거방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구체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다른 경우와 달리 주취감경에 대해서만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나) 김현석 전문위원 개선 의견 검토

○ 의견 요지

<제1안 : 심신미약 여부 및 음주 경위에 관한 사항을 반영>

음주, 마약 등으로 명정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 양형에 반영한다.

1. 범행을 저지를 의사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죄 후 면책사유를 삼기 위하여 자의에 의하여 음주 등으로 명정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가중사유로 고려한다.
2. 당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등으로 인하여 명정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 약간이라도[다소]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정상태를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
3. 제1,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때에 한하여 일반감경사유로 고려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없다.

<제2안 : 심신미약 여부만을 반영>

음주 등으로 명정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 양형에 반영한다.

1. 음주 등으로 인한 명정상태가 심신미약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명정상태는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음주 등으로 인한 명정상태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형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양형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안 :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음주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

<제3안 : 처단형과 선고형의 반영방식을 구분>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음주한 결과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1안을 기본으로 제시된 의견 ◆

- 상정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며, 1안을 기본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김현석)
- 국회에서 주취상태에서의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까지 논의 중인바, 현재로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가능한데 1안을 기초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적절(강영수)
- 1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가중이 적용되는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적용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서봉규)
- 고의명정은 술이나 마약의 힘을 빌어 더욱 과감한 형태로 범행으로 나아가는 경우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특별가중사유로, 과실명정의 경우에도 피고인 자신이 술을 마시면 범행에 나아가는 성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일반가중사유로 삼고, 우연명정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객관적인 증거(현재 특별한 증거설시 없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설시하듯이, 목격자의 진술 내용, 범행 현장의 상태, 범행 방법,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및 정황 등)에 의해서 명정상태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판결문에 설시하고 인정하여야 함(이주형)

◆ 별개 의견 ◆

- 고의 명정은 원칙적으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어 심신미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래의 범행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추가적인 가중요소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그밖의 주취상태에 대해서는 과실 있는 자초 명정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인자로 하는 전제에서 일반가중인자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이상원)

◆ 3안을 기본으로 제시된 의견 ◆

- 원칙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을 기다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 아래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주취상태를 가중요인으로까지 삼을 수는 없고, 3안에 따라 일반감경사유의 적용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김용철)
- 현재 국회에서 주취상태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는 법안이 일부 발의되어 있고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많은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으로 주취상태를 가중사유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현재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보다 다소 넓은 범위에서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적절(윤정근)
- 주취상태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된다면 술을 안 먹고 고의로 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면 충분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경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감경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사유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타당(최석윤)

(2) 특별양형인자의 조정

(가) 김현석 전문위원 개선 의견 검토

○ 의견 요지

<범행태양/수법 관련 양형인자>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인자에 다음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한다.

-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 약취·유인·감금의 수반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양형인자의 정의>

하.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13세 미만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 위 양형인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거. 약취·유인·감금의 수반

- 피고인이 범행수단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감금한 경우를 말한다.

너.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음모를 뽑거나,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정액을 먹게 하는 등의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 내(교정, 교사 포함), 학교 주변, 등하교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말한다.

<극심한 중상해 관련 양형인자>

(제1안) 별도의 특별인자로 설정하는 방안

- ‘극심한 중상해’를 중한 상해와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으로써 가중영역 상한의 특별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제2안) 치사 범죄유형을 준용하는 방안

- ‘극심한 중상해’는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강간치사의 범죄유형을 준용

(제3안) ‘정신적 상해’를 별도의 특별인자로 추가하는 방안

- 극심한 중상해가 발생하는 사례에서는 대부분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심각하므로 정신적 상해를 별도의 특별인자로 추가함으로써 가중영역 상한의 특별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제3-1안) ‘극도로 심각한 피해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인자로 추가하는 방안

- 성범죄와 관련 있는, 수술 등의 방법으로도 복구되지 않는 문신, 추상(영구 흉터) 등이나, 극도의 반영구적 정신적 후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남녀관계, 혼인생활 등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4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3유형 극심한 중상해”라는 별도의 범죄유형을 설정하는 방안

- 양형기준에서는 상해와 사망의 중간 단계에 이르는 ‘극심한 중상해’에 관한 별도의 유형을 설정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상정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며, 모든 방안을 그대로 채택하기보다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다음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김현석)
- 기본적으로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해와 관련해서는 정신적 상해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해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

별양형인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극심한 중상해’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하는 제1안을 지지(김용철)

- 4개의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며(다만 2차 양형기준 설정 대상인 약취·유인과의 관계는 검토 필요), 상해와 관련해서는 ‘영구적 장애나 생명의 위협을 초래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하는 제1안을 지지(서봉규)
-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피해자에게 영구장애를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발생시킨 상해'는 단순한 중한상해보다 한 번 더 가중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하는 제1안을 지지(이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우울증이 야기된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정신장애도 포함)(이주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두가지 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이 타당하며, 상해와 관련해서는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는 제3-1안을 지지(이 경우 중한 상해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충격이나 상해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보다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강영수)
- 극심한 중상해의 처리에 있어 기존 인자인 ‘중한 상해’와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는 별도의 인자를 창설하는 것보다는 범행태양이나 수법에 관한 인자를 발굴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그 경우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은 이에 경합범 처리기준이 중첩적으로 다시 적용되는 점, ‘약취·유인·감금의 수반’은 약취·유인에 대해서 2기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는 기존 인자인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는 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도 자칫 아동 대상 성범죄 유형에 본질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이중평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윤정근)

- 가중인자는 구성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자를 발굴할 수 있으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몇 개씩 추가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의 성범죄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중인자를 추가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범죄 양형기준과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함(이상원)
- 아동 성범죄 양형에 대한 최근 양형기준의 수정 논의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데에 있고 단지 형량을 가중하거나 특별양형인자를 발굴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최석윤)

(나) 정동민 위원 개선 의견 검토

○ 의견 요지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중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한다.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찬성(김용철, 이주형, 서봉규)
 - 아동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계·위력을 폭행·협박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
 - 특히 13세 미만의 경우(예컨대 5세~6세)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의사능력이나 지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만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감경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manifest injustice)됨
 - 1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단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미진하였음

- 실무적으로 5, 6세의 아동에게 사탕을 준다면 차 안으로 유인해서 사탕을 먹는 동안 아동을 추행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감경사유로 하는 것은 부적절

- 반대(강영수, 김현석, 윤정근, 이상원, 최석윤)
- 1기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양형기준의 단순성을 추구하면서도 폭행·협박이 행사된 경우와의 경중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채택한 인자로서 1기 양형기준의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에 추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폭행·협박과 위계·위력은 행위태양에 있어서 행위불법의 차이가 명백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자 사이에 차이를 전혀 두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폐지하기에 부적합
 -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실무상 폭행·협박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남용될 소지가 크지 않음

(3) 형량범위 조정

(가) 정동민 위원 개선 의견 검토 I (형량 상향)

○ 의견 요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특별 감경	감경	기본	가중	특별 가중
1	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u>9월 - 1년6월</u>	<u>1년6월 - 3년</u>	<u>3년 - 5년</u>	<u>5년 - 8년</u>	<u>8년 - 11년</u>
2	강제 유사성교	<u>1년6월 - 3년</u>	<u>3년 - 5년</u>	<u>5년 - 7년</u>	<u>7년 - 10년</u>	<u>10년 - 13년</u>
3	강간	<u>3년6월 - 5년</u>	<u>5년 - 7년</u>	<u>7년 - 9년</u>	<u>9년 - 12년</u>	<u>12년 - 15년</u>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	구분		특별 감경	감경	기본	가중	특별 가중
2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의제강간 (제2-1유형)	2년6월 - 5년	5년 - 7년	7년 - 9년	9년 - 12년	12년 - 15년 무기
	상해 /치상	유사성교행위, 강간 (제2-2유형)	3년 - 6년	6년 - 8년	8년 - 10년	10년 - 13년	13년 - 15년, 무기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찬성 ◇

● 위 개선 의견에 찬성(서봉규, 이주형)

- 일반국민과 정부부처에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대책으로 형량범위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음
- 범죄군별로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 이상 아동 성범죄에 한하여 우선 형량을 상향조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국 연방이나 영국과 비교할 때 우리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수준이 매우 낮음
- 형량범위 특별조정 제도로 인해 형량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법정형과 같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양형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량범위 하한의 가중이 불가피함
- 특별(행위)가중인자가 2개, 3개로 늘어나서 피고인의 악성은 더욱 가중됨에도 형량범위의 하한은 전혀 상승하지 않아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 합리성을 결여
-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관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7년’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명백히 반하고 기준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함

◇ 반대 ◇

● 위 개선 의견에 반대(강영수, 김용철, 김현석, 윤정근, 이상원, 최석윤)

-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좀 더 지켜본 후에 양형기준의 기본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기준은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사건유형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극히 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적용 준수율을 확보하고자 가중영역의 상한을 다시 확장하도록 한 것으로 형량범위 특별조정 결과의 하한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함
-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와의 균형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성범죄에 한하여 형량을 상향조정하거나, 양형기준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아동 성범죄 양형에 대한 최근 양형기준의 수정 논의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유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수립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사회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안처분을 강구하는 데에 있으며, 단지 형량을 가중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징입법’의 폐단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최석윤)

(나) 정동민 위원 개선 의견 검토Ⅱ(출발점 설정 관련)

○ 의견 요지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의 수가 가중요소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중간점 사이에서, 가중요소의 수가 감경요소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중간점 사이에서 결정하되, 감경요소

와 가중요소가 서로 동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찬성 ◇

● 위 개선 의견에 찬성(서봉규, 이주형)

- 경합범이나 형량범위가 특별조정된 경우에는 형량의 폭이 너무 넓어 지게 되므로 특히 출발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음
- 양형기준 시행 경과를 분석한 결과 실무상 형량범위 하한에 근접한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양형기준상 가중인자만 있음에도 형량범위 하한에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양형인자를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로 구별한 의미를 무력화하고, 형량범위 내에서의 선고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어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함
-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서구의 예에 비하면 감경인자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출발점이 필요
- 양형기준제 방식 논의 당시 현재의 방식을 제안한 법관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회의시 ‘양형인자가 전혀 없거나 양형인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중간점에서 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하였음에도 양형기준 해설서 작성시 중간점 선택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임
- 미국 워싱턴 디씨의 양형기준은 그 형량범위가 1년6월~6년과 같이 매우 넓지만, 양형기준 시행 전에는 형량범위 중간(mean)에서부터 평균 14개월 정도로 떨어져 있던 선고형 분포가 기준 시행 후 평균 8개월 정도로 줄어들어 양형편차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반대 ◇

● 위 개선 의견에 반대(강영수, 김현석, 윤정근, 이상원)

-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양형기준의

기본틀을 변경하는 의견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의 시행경과를 좀 더 지켜본 후에 검토되어야 함

- 제1기에서 모든 양형인자의 1:1 계량화를 전제로 하는 위 방식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방안임
- 출발점 설정은 예컨대 형량범위의 중간점 등을 관념적으로 지정할 경우 자의적인 지정이 되기 쉽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별 범죄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감으로 지정하는 것 이상이 아니며, 제1기 양형기준의 기본틀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채택되기 어려움
- 형량범위 하한에 근접한 사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현상에 해당

◆ 별개 ◆

- 출발점 설정의 필요성은 형량범위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폭이 적당한 경우에는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그 폭이 너무 넓고 다른 방법으로는 좁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발점을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최석윤)
- 독일의 예 등에 의하면 출발점을 반드시 중간으로 할 필요는 없고 1/3 지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4) 이연주 위원 개선 의견 검토

(가) 개정 제안서 관련 검토

○ 의견 요지

1.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동법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가중하는 내용

을 규정할 것을 제안

2. 형법 제정 시보다 30년 이상 늘어난 평균수명 연장과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성범죄에 한하여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가중 2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양형기준도 개정된 형법에 맞출 것을 제안
3.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할 것을 제안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여성계를 대표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과 확실한 처벌을 위한 좋은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주셨다는 데 공감하나, 다만 대부분 입법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의 개선 의견이나, 예컨대 유기징역 상한의 상향조정의 경우 그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향조정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오로지 성범죄에 한하여 법정형 상한을 상향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은 다른 범죄와의 균형 및 전체 형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소시효의 폐지에 관해서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공소시효의 폐지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동 성범죄에 한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는 부당성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제도 자체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나) 기타 개선 의견 검토

○ 의견 요지

- 성범죄에 있어 (1) 합의를 친족관계, 미성년 상대 범행 등에 있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2) 초범을 감경인자로 선정하기보다 재범 이상을 가중인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3) 일반양형인자인 ‘반성’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지적 사항은 대부분 1기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양형기준의 시행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최초 양형기준 설정 시 (1) 합의의 경우 위와 같은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되는 때에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2) 전과는 범죄간의 통일성 있는 처리를 위해 정리된 부분이며, (3) 반성의 경우도 자백, 진술거부권 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현행과 같이 ‘진지한 반성’으로 정리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 동종전과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으며, 반성을 양형인자로 고려한 경우에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기타 사항

(1) 양형자료분석 방안

- 2기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양형자료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와 같이 기록에 의해 실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1기와 비교하여 충분한 일정상의 여유가 있으므로 보다 신뢰도가 높은 확정사건을 기초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
- 전문위원 연구 일정을 조정하거나, 양형기준 설정 순서에 따라 양형자료조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전체 일정상 큰 무리가 없음
- 양형자료조사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해서는 곤란
- 새로 정립할 8개 범죄에 대해 이미 조사된 건수는 4,479여건에 불과하고 추가로 조사할 건수도 현재 3,854여건에 불과하여 업무부담이 크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제1기와 마찬가지로 판결문과 범죄경력조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주된 기초자료는 43,000건의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가 되어야 하고, 추가 양형자료조사는 개별 범죄의 특성을 보기 위한 보완적인 자료에 불과
- 2기 양형기준 설정 연구가 본격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확정기록에 의해 진행할 경우 준비와 실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2기 양형기준 설정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추가 양형자료조사는 이미 지난 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사항임에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적절함

(2) 전문위원 연구계획 및 양형기준 수정 일정 등

○ 2기 양형기준을 4개 범죄군씩을 구분하여 확정 의결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참고자료(위원회 21차 회의 보고사항)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1기와 달리 양형기준 설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4개 범죄군 또는 일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먼저 확정하여 시행하고, 이어 나머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우선순위가 높은 범죄부터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대한 불필요한 외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개별적 양형기준제를 채택한 만큼 먼저 완성된 양형기준을 분리하여 시행하더라도 문제될 점이 없으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유보할 명분이 없음
 - 전문위원 임기종료 시점을 고려할 때 우선 설정할 범죄에 맞추어 전문위원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1기와 마찬가지로 개별 양형기준 설정 후 양형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한꺼번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2기에서는 최초 양형기준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양형기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먼저 시행할 경우 양형기준 수정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시행되자마자 수정되는 결과가 발생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조장될 우려가 있음
 -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설정 속도가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음
 - 이 방안에 의하더라도 대상범죄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연

구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의 효율성이 저해되지는 아니함

- 그밖에 전문위원 내년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논의 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논의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함
- 한편, 위 일정이 정해지면 그 일정에 따른 업무의 강도를 검토해서 현재 결원중인 전문위원 4명의 조속한 충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양형위원회 운영 관련

- 양형위원이 위원회 회의 시에 직접 제출한 자료는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양형위원회에서 별도로 보존하거나 부록 형태로 자료집을 만들어 두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법원조직법상 연간보고서의 작성·보고 이외에도 양형위원회 활동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양형위원회를 대외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22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22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